

## 중국과 일본의 경제 개방과 분쟁관리: 조어도 분쟁을 중심으로 (2010-2012)

홍건식 ■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영토 갈등이 왜 분쟁 또는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 2010년 9월 조어도에서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은 일본 당국에게 선장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며 일본의 회담 제의를 거절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 선장 체포 10일 만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을 발표했다.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발표 다음 날 구속한 중국어선 선장을 석방하면서 2010년 조어도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2010년 조어도를 둘러싼 두 국가의 일련의 갈등과 해결의 과정에서 두 국가의 분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분쟁을 억지하는데 있어 경제가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중국, 일본, 조어도, 자본주의, 평화

## I. 서 론

2010년 9월 조어도에서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sup>1)</sup> 사건 발생 초기 일본은 중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도 조어도를 중국의 핵심적 이해 중 하나인 영토 문제로 고려하며 양측의 갈등은 격화되었다. 중국은 일본 당국에게 선장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며 일본의 회담 제의를 거절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은 선장 체포 10일 만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을 발표했다. 일본의 노다(野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E-mail: hks21c@yonsei.ac.kr)

1)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그리고 일본명은 센카쿠 열도(尖閣列島). 이하 조어도로 표기 한다.

田) 내각이 2012년 9월 10일에 실시한 조어도 '국유화' 정책으로 중·일간 영토 분쟁은 재점화 되었지만 이 또한 큰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2010년 조어도 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양측의 핵심적 이익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국가는 갈등이 군사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했는가?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분쟁으로 촉발되지 않도록 만든 변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국가의 경제관계에서 찾고자 한다.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갈등에 대한 기존 연구는 방대하다. 조어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위협적 해결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김준형 2012; 서정경 2010),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해 현상유지를 택할 것이라는 주장(김예경 2008), 조어도의 문제는 미중 그리고 중일간의 패권경쟁이라는 주장(윤종변 2015),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한국이 조어도 분쟁에 미치는 영향까지(윤호 외 2016) 다양한 영역에서 조어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확대일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국제 여론의 영향(Zhongqi 2007, 87), 양국의 해군력의 차이(Holmes 2012), 미국의 균형자 역할이 중국과 일본 양국의 전쟁 가능성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주장(김기주 외 2013)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과 일본이 조어도 를 둘러싼 갈등이 분쟁 또는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이들의 주체적인 분쟁 관리를 간과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 협력이 분쟁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 미친다는 보고(이재철 2006; 이진명 2013)를 고려한다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조어도 분쟁은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가 될 수 있다.

경제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자유주의 이론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들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그리고 절대적 이익과 복합 상호의존이 국가간 협력을 만들 것이라 주장한다. 보다 최근에는 시장경제와 같은 자본주의 요소의 확대가 국가간 평화를 달성하는 핵심 변인임을 주장하는 이론적 논의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자본주의 평화론(capitalist peace)'이라 한다(Weede 1996). 이는 시장경제 요소가 국가간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고 분쟁이 발생된다면 국가에게 보다 많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분쟁 행위를 제약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논의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분쟁을 분석한다면 경제적 요인이 이들 갈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를 둘러싼 영토 갈등이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은 요인 중 하나를 경제 영역으로 고려하고, 두 국가의 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이들의 분쟁관리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경제가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대외정책 기조와 함께 조어도 문제의 전개를 살펴본다. 4장을 통해 두 국가의 경제 개방과 분쟁 발생시 중국과 일본이 갖게 되는 경제적 비용을 논하고, 2010년 중국과 일본의 분쟁관리를 고찰하며 결론을 도출한다.

## II. 경제개방과 분쟁관리

### 1. 분쟁관리

국가는 분쟁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분쟁관리는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판단이다(이재인 2013; George 1991). 현실주의는 국가가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국과의 힘의 균형을 통해 분쟁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Waltz 2010). 그러나 현실주의 논의는 국가가 분쟁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쟁 발발 이전에 국가들이 어떻게 협상에 도달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제공하지 못한다. 한편 자유주의는 국가의 제도와 경제적 상호의존, 국가의 절대적 이익 추구하고 국가간 복합적인 상호의존이 협력을 달성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지만, 이들 또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국가의 분쟁 관리에 대한 동학을 보이는 데는 제한적이다(Gartzke et al. 2010, 122). 특히 무역의 상호의존을 통해 국가의 행태를 보이는 연구들은 세계화의 확대와 증가되는 자본의 이동을 간과하는 한계를 갖는다(Gartzke 2007). 또한 민주주의 국가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정치 제도적 차원의 설명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Gartzke et al. 2010; Gartzke et al. 2003).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즉 시장경제 확대는 국가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또는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간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는 기반으로도 작동될 수 있다(Gartzke 2007; Gartzke et al. 2001, 2003; McDonald 2009, 2010; Mousseau 2000, 2009).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분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투자자들은 분쟁으로 입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 발발 이전에 자신의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시킨다. 이 같은 조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치 지도자는 투자자들의 자산 이동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갈등을 고조시키거나 낮추게 되며 이는 상대국가에게 신호로 작동된다. 결국 자본

주의 경제체제에서 투자자의 자본의 이동은 분쟁 당사국에게 신호와 위임의 기능으로 작동하고, 정치 지도자에게는 비용 최소화를 위한 안정 추구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 국가 간 분쟁 또는 전쟁 행위는 제약된다.

정의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평화론’이란 자본주의 경제 질서 구축이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을 억지해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Weede 2011). 이는 분쟁에 대한 시장의 신호적 역할과 분쟁 비용, 위임의 문제 그리고 정부의 정책 자율성 제약을 통해 분쟁이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평화의 논의는 크게 세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된다(최종건 외 2015).

첫째로 시장은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들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든다(Gartzke et al. 2003). 이는 분쟁에 대한 시장의 신호적 역할에 기인한다(Gartzke 2007). 국가간 분쟁은 상대 국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된다(Fearon 1994; Schultz 1998, 1999).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들이 상대 국가에 대한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인(misperception)과 안보딜레마를 발생시키며 결국 분쟁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한다(Jervis 2017).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결된다면 국가간 분쟁은 억지되고 평화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자본주의 평화론 연구자들은 시장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특히 성숙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무역의 상호 관계 뿐만 아니라 자본의 상호 관계에도 초점을 두며 국가 간 경제의 연결성에도 관심을 둔다(Gartzke et al. 2001, 392). 자본은 국가가 위기 또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 정치적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이동한다(Morrow 1999). 분쟁 상황에서 자본의 이동은 정치지도자에게는 비용으로 작동되고 타국에게는 정보로 작동되기 때문에 분쟁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동된다.<sup>2)</sup>

국가에게 전쟁은 비용으로 작동된다. 왜냐하면 현대전에 점령이라는 전략은 고가의 장비와 함께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전쟁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은 정치지도자에게 비용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Gartzke 2007). 특히 경제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전쟁의 비용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Rosecrance 1986). 성숙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는 국가일수록 국가는 전쟁에 대해 높은 비용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전쟁에 대한 비용이 분쟁을 추구하려는 국가의 행태를 제약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2) 기존의 상업주의 자유주의의 경험적 모델이 전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를 무역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제약이 있었다(Gartzke et al. 2001, 391).

둘째로 시장은 국가간 규범으로 작동해 상호 약속을 지키겠다는 위임(commitment)에 대한 신뢰성을 만든다(Mousseau 2000, 2009).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 경제 발전이라면 경제 발전은 시장 경제에서 계약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는 곧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과 같이 작동된다(Mousseau 2009, 277). 당사국들이 체결된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은 위임에 대한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선진 자본주의를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는 더 많은 계약의 기회를 개인에게 제공한다. 요컨대 계약에 이익을 가진 정책 결정자는 투표자들과 해외 자본시장에 계약을 받게 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세계 시장을 보호하려는 공통의 이익을 가짐으로써 국가들은 평화를 추구한다. 이는 국가가 주권을 계약으로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다.

끝으로 국가의 재정 구조가 공적 자산(public asset) 보다 사적 자산(private asset)으로 이루어진다면 전쟁에 대한 동원 능력이 제한되며 이는 국가 사이의 안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McDonald 2009, 17-18). 예컨대 국가가 분쟁에 돌입하는 경우 국가의 경제 구조가 공적자산으로 보다 많이 이뤄져 있는 경우 확보된 자율성으로 타국에 대한 예방 전쟁 그리고 무기 경쟁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는 공적 자산 보다 사적 자산으로 이뤄진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되며,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제약하고 국가의 분쟁 행위를 억제 하게 된다.

요컨대 자본주의 안정은 국가의 자본주의 경제 질서 구축과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 성장과 번영은 국가의 분쟁 행위를 억제하고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게 만든다. 때문에 국가들의 경제성장,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는 국가일수록 분쟁 또는 전쟁과 같은 갈등적 행위는 제약된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시장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며 비용이 되는 전쟁을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 안정은 국가가 경제 번영과 외교적 협력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국가 사이에 이익의 차이가 발생되더라도 시장을 통해 안정적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다. 이는 국가 간 정치적 그리고 제도적 관계가 없이도 말이다.

## 2. 경제적 상호의존과 경제발전

자본주의 안정을 만들어내는 경제 개방은 국가의 분쟁 행위를 어떻게 억제 또는 제약하는가?3) 국가의 경제 개방을 보여주는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자유주

의 시각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적 상호의존은 국가의 경제 개방을 보여주는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sup>4)</sup> 특히 경제 개방은 타국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서도 국가의 분쟁 행위를 제약하는 변수로 고려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의 행동을 국제적 차원의 무역과 국내적 차원 경제 발전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무역, 경제 발전 그리고 분쟁에 대한 논의는 상업적 자유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상업적 자유주의자(commercial liberalism)는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무역에 초점을 두고 국제관계 연구를 진행했다. 국가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획득 할 수 있으며, 무역 행위의 제약은 이들의 이익에 손해를 입게 되므로 국가들은 갈등 또는 분쟁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 국가의 분쟁 행위를 억지시킨다(Mansfield et al. 2003; Polachek 1980). 또한 무역의 상호의존과 평화의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무역의 상호의존이 국가들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Gartzke et al. 2001; Oneal et al. 1997a, 1997b, 1999a, 1999b, 2003).

한편 국가가 세계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는 국가의 경제 발전으로 고려할 수 있다. 무역은 양자적 차원에서 국가 사이에 경제 관계를 보이는 최소한의 변수이다(Gartzke 2007, 170). 왜냐하면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전쟁은 비용이기 때문에 무역의 손해가 전쟁의 비용이라고 고려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은 국가의 경제 개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수로서 국가의 양자적 관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국가가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가에 따라 취약성과 민감성을 가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 성장은 국내적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하는 집단보다 경제 개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다양한 연합을 만들어 낼

3) 분쟁에 관련하여서는 갈등, 군사적 충돌 등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분쟁의 정의는 어느 한 국가가 짧은 기간에 타국의 정부, 대표자, 자산 또는 영토에 군사적 위협 또는 시위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Jones et al. 1996, 163). 관련해 COW Data 프로젝트에 의해서 취합된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MID)의 분쟁(dispute) 데이터가 대표적이다(Jones et al. 1996).

4) 오늘날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간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을 무역과 경제발전, FDI를 주요 변수로 측정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무역의 상호의존이 국가들 사이의 분쟁과 전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음을 참조(Gasiorowski 1986; Oneal et al. 1996, 1997a, 1997b, 1999a, 1999b, 2003; Gartzke et al. 2001 외 다수). 경제발전이 분쟁과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을 참조(Gasiorowski 1986; Oneal et al. 1997a, 1997b; Polachek 1980; Polachek et al. 1999 외 다수). FDI가 미치는 영향은 다음을 참조(Altincekic 2009).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은 WTO와 같은 경제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국가간에 약속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변수로 이해될 수 있다. 시장 경제는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돌아가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경제의 불안정성은 정책결정자에게 정치적 비용으로 작동 된다. 이 같은 시장경제 특성으로 정책 결정자는 정치·경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며, 이는 정치지도자 사이의 평화의 이익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적 가치 공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 때문에 국가가 세계 시장에 얼마나 노출되었는가에 따라 국가의 분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따른 평화는 외적 협력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계적 역동성은 위협의 인식과 적대적 민족주의를 상쇄시키며 궁극적으로 번영과 진보의 기초를 만든다 (Mueller 2010).

### III. 중국과 일본의 대외정책과 조어도 위기

#### 1. 중국과 일본의 대외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 발전과 평화로운 발전 전략에 기초해 대외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평화와 발전이 시대적 주류가 될 것이라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인식은 이후 중국의 안정적 대외 환경 구축과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두게 했다. 그 정책 목표도 중국의 경제 발전에 유리하도록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 조성,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력의 봉쇄 정책 저지 그리고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 강대국 위상 회복과 국제적 영향력 증대에 있었다(Goldstein 2001). 이 같은 덩샤오핑의 세계관과 대외정책 기조는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0년 전후 후진타오 시기의 대외정책은 ‘화평발전(和平發展)’과 ‘조화세계(和諧世界)’이다.<sup>5)</sup> 후진타오 체제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 중국의 내적 안정과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국제사회에 ‘중국위협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은 평화적 부상과

5) 개념적 차원에서 화평발전은 평화롭게 발전함을 의미하며, 조화세계는 조화로운 공존을 뜻한다(김애경 2005).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같은 대내외적 환경에 직면한 중국은 2004년 ‘화평발전’을 제시하였고 2005년 9월에는 ‘조화세계’를 대외 정책으로 강조하며 세계 공동 번영을 실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과 국제체제와의 조화를 추구하지만 국제질서가 중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이익을 반영한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였다(이정남 2010, 46). 또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를 보였다.

이 시기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국가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핵심 이익’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박병광 2013, 147). 2011년에 발간된 「평화발전백서(中国的和平发展)」에 따르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통합, 국가통일 그리고 중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치제도와 사회안정 그리고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정의한다. 결국 중국의 후진타오 체제는 ‘화평 발전’과 ‘조화세계’를 통해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존 질서와 조화를 추구할 것임을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강조하며 중국의 영토적 이익을 고수하려는 양면 전략을 보였다.<sup>6)</sup>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도입을 위해 구조개혁과 대외개방을 가속화 했다. 2001년에는 WTO 가입과 함께 관세 인하, 금융시장 개방, 외자 유치와 해외 투자 확대 그리고 아시아권 국가와의 FTA 체결을 추진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원으로서 기능했다.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경제 정책 기조는 2009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진타오 체제는 중국의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 정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관련해 후진타오 주석은 2010년도 경제 정책의 6대 주요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거시경제 조절능력제고, 경제구조 개혁, 농촌지역 발전, 금융시장 안정, 대외 수출 안정 그리고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었다. 2009년 12월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경제는 아직 확실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경제 안정과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서울경제』 2009/12/31).

당시 일본은 새로운 여당으로서 그리고 하토야마(鳩山 由紀夫) 내각이 등장했

6) 2010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미 한 차례에 있었다(Swaine 2011, 113).

다. 민주당이 지난 54년간 집권 여당이었던 자민당을 이김으로써, 일본의 외교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있었다. 민주당 정권의 대외 정책은 미국과의 ‘대미 대등’ 외교와 ‘아시아 중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종전의 자민당 정책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자민당이 주장하는 미국 중심의 외교 행태를 ‘대미 추종 외교’라고 비판하며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관계’로 전환할 것임을 밝혔다(박철희 2014, 172). 그러면서도 하토야마 총리는 미·일 신뢰 관계 구축이 외교의 최우선 과제임을 밝혔다(『경향신문』 2009/09/17). 일본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중층적인 미·일 관계’를 심화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경향신문』 2009/11/14). 또한 하토야마 총리는 자신의 외교 노선을 ‘아시아 중시 정책’ 그리고 ‘우애 외교’라고 밝히며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한겨레』 2009/08/31).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전제로 미·일 관계 발전에 기여 한다는 주장이다(조양현 2014, 210). 하토야마 총리는 ‘미국의 제외’는 생각할 수 없음을 밝히며 대미 외교가 일본 외교의 핵심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당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미·일 관계는 지속성을 보였다. 경제적 차원에서 하토야마 내각은 국내적 차원의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 회복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하토야마 내각 당시 경제 정책은 예산 문제로 상당 부분 수정이 있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현(沖縄県)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이전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하토야마의 뒤를 이은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은 이전 내각과 달리 소원해진 미·일 동맹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전략을 추진했다. 또한 ‘미·일 동맹 심화’라는 현실주의 외교 안보 노선을 택하며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미국 중심의 대외 정책 노선으로 회귀했다(『세계일보』 2010/06/07). 경제 정책과 관련해 간 나오토 총리는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을 실현’을 위해 재정 재건을 약속했지만 거시 경제 정책 차원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박철희 2014, 34). 한편 민주당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자 2010년 12월 신방위조약에서 ‘동적방위력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자민당 정권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계승하면서 악화된 일본의 재정 상태를 반영한 현실주의적 전략이다. 이 구상은 핫카이드를 중심으로 한 구소련(러시아) 위협 대응에서 중국 위협 대응을 위한 방위력 재편으로, 동아시아에서 일본 주도의 국가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김용민 2011, 187).

## 2. 조어도 위기의 경과

조어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역사적 관점에서 실질적 지배를 했지만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강제적 할양이었다는 입장이다(박동훈 2012). 조어도는 1971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따라 1972년 일본에 귀속되었다.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1960년대 후반 UN보고서를 통해 조어도 열도에 막대한 천연자원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조양현 2014, 217). 그러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를 수립하고 1978년에는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며 조어도 문제는 잠정적으로 보류되었으며, 조어도와 관련한 영유권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이명찬 2013, 273). 2000년대 들어 중국 측이 양국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해역에서 7개의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면서 조어도 문제는 다시 양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2008년 5월 후진타오 주석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양국은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 논쟁보다 동중국해의 유전과 가스전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며 발전적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후 중국 측은 공동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일본은 공동개발을 위한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면서 중일 양국은 조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2010년 9월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일본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선원 15명 전원 구속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교섭을 연기하고 9월 11일에는 주중일본 대사를 소환해 항의했다. 다음날 선원 14명이 석방되며 일단락되는 듯이 보였으나, 일본 정부는 선장에 대한 구류 지속방침을 지속했고 9월 말 양국 총리간 정상회담의 취소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내비쳤다. 9월 23일에는 중국 측이 중국 선장의 무조건 석방을 일본 당국에게 요구하며, 항의와 더불어 일본에 대한 회토류 수출 중단 조치 등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했다. 중국의 회토류 대일 수출 중단 사실이 알려지자 24일 일본은 구속한 중국 선장을 석방하게 되었으며, 28일 중국은 회토류 수출 통관을 재개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냈다(『문화일보』 2010/09/29). 이후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간 나오토 일본총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ASEM)가 열린 브뤼셀에서 양국관계 개선에 합의하며 사태는 일단락되었다(이명찬 2012, 71).

2012년 9월 10일 일본 내각이 조어도 열도 5개 도서 가운데 3개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는 재촉받 되었고 중국은 센카쿠열도 영해기선을 선포하며 맞대응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다시 점화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중

국의 반발을 우려해 센카쿠 열도를 매입하는 대신 실효 지배 강화 조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겠다고 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같은 해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센카쿠 매입은 불법이며 무효임을 일본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조어도에 대한 양측의 갈등은 중국 50여개 도시의 반일 시위로 확산되었고, 산둥성(山东省)과 칭다오(靑島) 등지에서는 일본계 기업이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중일 국교 정상화 40주년 기념식을 무기한 연기할 것임을 일본에 통보했다. 2013년 4월에는 일본의 극우단체 회원 80명이 조어도 영해 진입,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 공중 대치하는 강경한 입장이 상호간 지속되었다. 한편 중국은 조어도를 중국의 '핵심 이익' 대상으로 최초로 공식 선언함으로써 일본과의 타협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연합뉴스』 2013/04/29, 2013/05/09).

#### IV. 중·일 조어도 위기와 안정화

##### 1. 중국과 일본의 경제개방과 분쟁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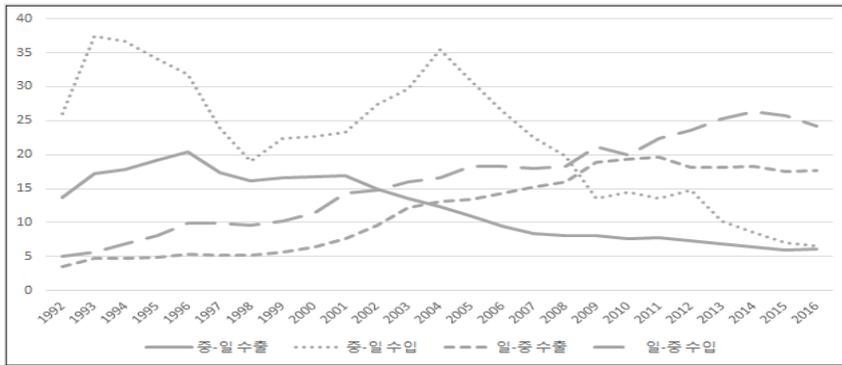
중국과 일본의 경제 개방을 보이는 지표들은 다양하지만 크게 국가의 경제 발전과 두 국가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고려할 수 있다.<sup>7)</sup> 경제 발전은 세계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분쟁과 같은 불안정성은 경제가 더욱 성숙한 국가에게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국가들의 분쟁 행위를 제약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 경제의 발전은 국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된다.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은 분쟁에 관련된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보여준다. 무역의 상호 의존은 분쟁 당사국간에 분쟁 발생시 국가에게 비용과 같은 취약성을 부과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된다면 무역은 보다 안정적인 시장의 대체재 확보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경제 안정 또는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 결정자의 분쟁 행위를 제약하는 특성을 가진다. 결국 분쟁은 분쟁 당사국의 이익관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경제 개방은 세계 시장에 대한 개방성과 분쟁 당사자간의 개방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 1> 그리고 <표 1>과 같이 무역 영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양자 관계를

7) 본 연구는 StatsAPEC과 GDP 자료를 사용하며, 무역의 상호의존의 측정 방법은 오닐과 러셋(Oneal et al. 1997a)을 따른다.

고려한다면 중국의 총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수출과 수입 영역에서 모두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성은 2010년 이후에도 증가하며 일본의 수출입 무역총액 중 20% 내외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총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는 의미는 일본의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두 국가 사이에서 갈등 또는 분쟁이 발생한다면 분쟁으로 발생하는 손해 또는 취약성은 일본에게 더 크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림 1〉 중국(일본)의 총무역 중 對 일본(중국) 무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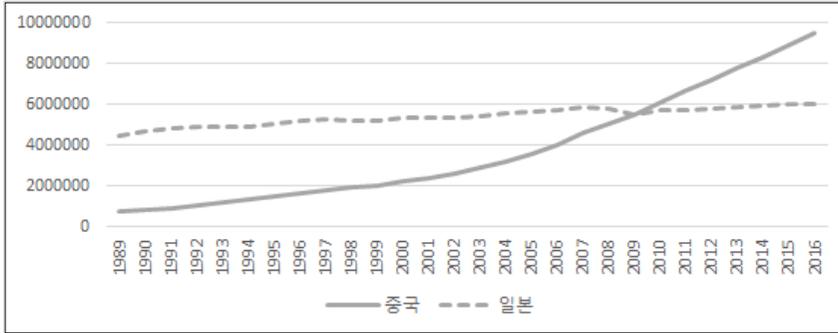


〈표 1〉 중국(일본)의 총무역 중 對 일본(중국) 무역 비율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중-일 수출	7.67	7.81	7.40	6.80	6.38
중-일 수입	14.48	13.60	14.80	10.28	8.58
일-중수출	19.41	19.68	18.06	18.10	18.31
일-중수입	19.90	22.34	23.60	25.31	26.27

출처: StatsAPEC The Key Indicators Database

〈그림 2〉 중국과 일본의 GDP 총액(Constant 2010 USD (in mill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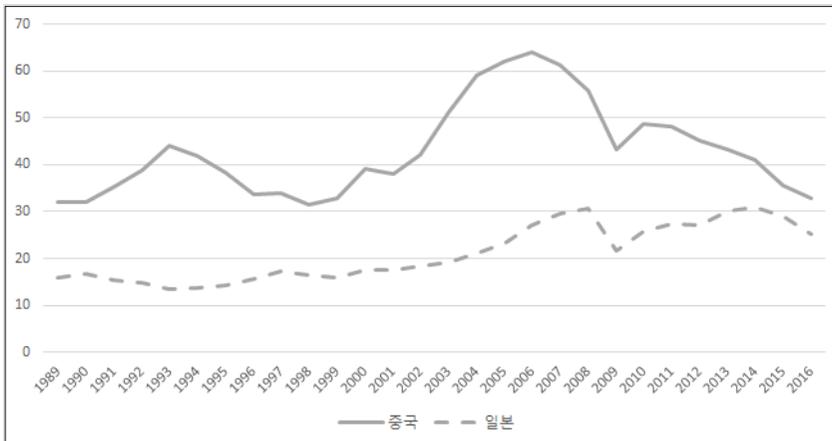


〈표 2〉 중국과 일본의 GDP 총액(Constant 2010 USD (in millions))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중국	829562	2237081	6100620	6682403	7207390	7766513	8333287
일본	4682814	5348931	5700098	5693519	5778642	5894231	5916317

출처: StatsAPEC The Key Indicators Database

〈그림 3〉 중국과 일본의 GDP에서 무역의 비율



〈표 3〉 중국과 일본의 GDP에서 무역의 비율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중국	31.99	39.15	48.75	48.09	45.17	43.29	41.04
일본	16.65	17.57	25.68	27.26	27.15	30.03	30.97

출처: StatsAPEC The Key Indicators Database

그러나 국가의 행동은 양자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대상 국가 이외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경제의 개방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크기가 클수록 분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다. 또한 무역의 관계에서도 두 국가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다 해도 상대 국가의 무역의 양이 국가 총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면 분쟁으로 인한 충격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고려할 수 있다.

<그림 2>와 <표 2>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의 GDP 총액은 중국보다 지속적으로 높아 왔다. 1990년 중국(829,562 백만 달러)의 국내총생산은 일본(4,682,814 백만 달러)에 약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2009년을 기점으로 하여 2010년에는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일본을 앞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두 국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에 따른 비용을 중국이 더 많이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그림 3>과 <표 3>의 중국과 일본의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중국은 일본보다 수출 의존적 형태의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부의 충격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다. 1990년 중국은 국내총생산에서 무역의 비율이 30%, 일본은 16%로 중국이 일본 보다 2배 정도로 외부의 충격에 보다 민감하다 할 수 있다. 일본의 무역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2014년 기준을 고려해 보아도 여전히 중국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2012년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은 국민에 초점을 둔 경제 발전 목표를 두고 있었다(이봉걸 2010).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 12차 5개년(2011-2015) 계획(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은 빠르지만 안정적인 경제 발전, 경제 구조의 전략적 조정, 주민소득 증대, 사회건설 가속화 그리고 개혁 개방의 심화를 발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 방향에서도 내수 확대, 민생보장, 조화로운 지역발전, 산업구조조정과 전략 산업 육성에 두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은 경제 성장

에 대한 초점 보다 복지의 확대와 같은 안정적인 경제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두 국가의 양자적 관계에서의 개방성은 일본이 중국에 보다 많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정책은 안정적인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그 개방적 차원에서도 중국은 2009년 이후 상품무역 차원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분쟁에 따른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 또한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조어도 문제가 발생되었을 당시 두 국가의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변인 중 하나로 작동되었다.

## 2. 중·일 분쟁관리 동학

조어도 영유권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양자간의 일차원적 갈등이 아니었다. 조어도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해양공간으로서 경계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국내정치와 외교정책과도 연결되는 복합적인 문제다. 경제적 차원에서 조어도의 영유권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도 달라지는 문제이며 관련 해양 자원에 대한 이익으로까지 연결되는 핵심적 사안이다(Pedrozo 2010, 10). 특히 중국에게 조어도 지역은 '핵심이익'으로 태평양 진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진기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조어도 문제는 미·일 동맹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안보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세계적 차원에서도 동아시아 주요 국가로서 일본의 위상 재구축을 위한 의도가 담긴 사안이기도 하다(Pempel 2011, 256).

이 시기 중국은 영토와 주권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으로 규정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주권과 영토문제를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서울신문』 2010/09/27) 영토주권이 중국의 핵심적 이익임을 강조했다. 결국 중국은 핵심적 이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무력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하도형 2012). 한편 일본은 하토야마 내각으로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관계와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핵심적 정책과제로 두었다.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의 확대'를 시도한 이유는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를 전제로 미일관계 발전에 기여함을 전제했다. 또한 이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분쟁은 분쟁 발생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두 국가의 분쟁 행위를 억지 했다. 이는 희토류를 둘러싼 두 국가의 입장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조어도 분쟁이 중·일 관계에 영향을 미쳐

개혁 개방과 경제 건설을 중점으로 하는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중국이 조어도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당시 중국은 조어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통해 조어도가 중국의 핵심적 이익임을 일본에게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회토류 수출금지, 여행 중단 권고에 이어 앞으로 일본이 힘을 쏟고 있는 에너지 환경 산업 분야의 기술 교류 중단, 공공사업 입찰에서 일본 기업의 배제 등을 단행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자 뒤늦게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우려하게 되었다(『문화일보』 2010/09/24). 일본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는 중국의 경제적 조치들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면 중국과 일본이 호혜적인 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등 외교적인 관계의 재개를 제안 했다(『동아일보』 2010/10/04). 또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도 “중국과 일본이 좋은 이웃으로 전략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확고하게 구축함으로써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가야 한다”며 중일간 상호 호혜적 관계 회복되기를 바랐다(『동아일보』 2010/10/04). 결국 2010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회토류 금수 조치는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었고 일본 정부로부터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는 결국 중국이 군사력을 통한 분쟁 관리 보다 경제를 통한 분쟁 관리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sup>8)</sup> 한편 일본은 중국의 회토류 수출 금지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군사적 분쟁으로 격화시키기 보다는 무역을 통해 대체재를 찾음으로써 회토류 분쟁이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차원의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지할 수 있었다.<sup>9)</sup>

- 
- 8) 중국의 공세적 움직임은 중국에게 역풍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중국과 일본의 마찰과 관련해 미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회토류 생산기업 자금 지원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바트 고든(Bart Gordon) 과학기술위원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중국의 선의에 맡겨 놓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했다(『한겨레』 2010/09/28). 또한 2010년 이전 중국의 세계 회토류 시장 공급 점유율은 전 세계 공급 90% 안팎을 차지했으나 2010년 이후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각국의 중국에 대한 회토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는 움직임도 함께 보였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회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제기한 제소에 손을 들어 줌으로써 2015년 중국은 회토류에 부과해온 수출세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 9) 일본은 2010년 당시 회토류 수입의 중국 비중을 90%에서 70%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서울경제』 2010/11/24). 또한 중국의 회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압박을 회토류 수입선의 다변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결국 2010년-2013년의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분쟁에 따른 불안정성이 안정성으로 전환되는 요인에는 중국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크게 작용했다. 중국의 높아지는 경제 개방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중국의 경제 불안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적 충돌을 통한 갈등을 추구하기 보다는 간접적 수단으로서 희토류를 통해 현상유지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차원에서 일본의 행동을 억지 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WTO를 통한 국제체계의 제약과 희토류 수입국가들의 대체재 확보로 중국 희토류 세계 점유율은 낮아지게 되었다. 결국 2010년~2013년의 조어도 분쟁은 두 국가의 경제 개방이 발생된 분쟁을 억지한 사례이며 동북아시아 역내 자본주의의 안정 질서가 작동되었다 할 수 있다.

## V. 결 론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은 정치·경제 그리고 군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이다. 2010년 9월 7일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는 사건은 표면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해양 분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과 일본의 핵심적 이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항이었다. 첫째로 조어도 분쟁은 영토적 이익의 갈등이었다. 중국과 일본 양국 모두 조어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해 왔으며 일본은 실효적 지배자이기도 하다. 둘째로 조어도는 자원 경쟁의 장으로서 기능을 한다. 조어도 일대에는 막대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2010년 분쟁 이전에 중국과 일본은 조어를 둘러싸고 자원 경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협력적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이 조어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갈등은 촉발되었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갈등은 영토·자원이라는 핵심적 이해에 대한 첨예한 갈등을 보인 사건이지만 두 국가 모두 갈등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관리 행태를 보였다. 특히 양자 관계에서 일본은 중국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차원의 국내총생산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 일본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에 더 높은 경제적 의존성을 보이는 중국이 더 큰 경제적 비용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

후에도 '희토류 종합 대책'을 마련해 비축, 대체재 개발, 해외 광산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주력했다(황필규 2010).

다. 또한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일본의 규모와 같아지고 있어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이 중국에게도 유사하게 작동한다고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희토류 수출제한을 통해 일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이 같은 중국의 대외전략은 조어도 분쟁이 중·일 관계에 영향을 미쳐 개혁 개방과 경제 건설을 중점으로 하는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외 정책 목표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희토류 문제 발생과 관련해 중국과의 자원경쟁을 택하기 보다는 무역을 통해 중국 희토류에 대한 대체재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영토 분쟁이 자원 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지할 수 있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는 이후 중국에게 역풍으로 작동되었다. 당시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97%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분쟁으로 세계 각국은 중국에 대한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처 다변화에 나섰다. 특히 세계 무역기구(WTO)가 미국, 일본 등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제기한 제소에 손을 들어 줌으로써 2015년에 중국은 희토류에 부과해온 수출세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세계 시장은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을 억지했다.

결국 2010년 조어도 분쟁은 중국과 일본의 이익이 충돌된 사건이다. 두 국가의 영토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공간이었지만 양국은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중국과 일본은 조어도 갈등이 시작된 이래 양국 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의 경제 개방, 경제 발전 그리고 경제적 상호 의존과 같은 시장경제요소가 두 국가의 갈등이 분쟁 또는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분쟁 관리 기제로 작동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김기주, 황병선. 2013. "센카쿠(다오위다오)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전쟁의 단계 이론 적용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53(2), 39-68.
- 김애경. 2005.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국제정치논총』 45(4), 215-234.
- \_\_\_\_\_. 2008. "중국과 베트남 간의 영토분쟁 해결방식." 이동물 외. 『중국의 영토분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김용민. 2011. "조어군도와 센카쿠열도: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충돌이 가진 함의." 『국제지역연구』 15(3), 175-198.
- 김준형. 2012. "G2 관계 변화와 미국의 대중정책의 딜레마." 『국가전략』 18(1), 5-26.
- 박동훈. 2012. "개혁, 개방기 중국 정치학 발전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연구』 27(1), 221-252.
- 박병광. 2013.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연구』 60, 139-170.
- 박철희. 2014.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서울: 동아시아재단.
- 서정경. 2010.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미중관계." 『국제정치논총』 50(2), 87-114.
- 윤 호, 고재휘. 2016. "조어도 분쟁과 한국." 『일본문화연구』 57, 167-182.
- 윤종변. 2015. "조어도의 영토 분쟁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2(2), 119-148.
- 이명찬. 2012.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과 동북아." 『국제정치논총』 53(1), 255-293.
- \_\_\_\_\_. 2012. "일·중 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영토해양연구』 3, 52-83.
- 이봉걸. 2010. "중국 12차 5개년(2011~2015) 계획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Trade Focus』 9(15).
- 이재인. 2013. 『경제적 상호의존과 분쟁관리- 정책결정자의 전략적 판단을 중심으로』.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재철. 2006.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 분쟁의 상관관계." 『국제정치논총』

46(3), 97-120.

- 이진명. 2013.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과 분쟁." 『국제정치논총』 53(3), 69-102.
- 이정남. 2010. "조화세계 (和諧世界) 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 『국제정치논총』 50(1), 37-60.
- 조양현. 2014. "일본의 방위력 강화: 국가안보전략과 '신방위계획대강' 채택." 『안보현안분석』 91.
- 최종건, 홍건식. 2015. "자유와 자본 그리고 평화 구축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민주평화론과 자본주의 평화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2), 63-89.
- 하도형. 2012. "2010 년 중·일 다오위다오 분쟁과 중국의 대응." 『영토해양연구』 3.
- 황필구. 2010. "[글로벌소싱] 일본, 희토류 대체기술 개발에 총력." 『Kotra 해외 시장 뉴스』 .

#### 영문 자료

- Altincekic, Ceren. 2009. *FDI Peace: Which "Capitalism" Leads to More Peace among Dyads?*. Working Paper, One Earth Future Foundation.
- Fearon, James D. 1994.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3), 577-592.
- Gartzke, Erik. 2007.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166-191.
- Gartzke, Erik and Quan Li. 2001. "Investing in the Peac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2), 391-438.
- \_\_\_\_\_. 2003. "War, Peace, and the Invisible Hand: Positive Political Externalities of Economic Globaliz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7(4), 561-586.
- Gartzke, Erik, and J. Joseph Hewitt. 2010. "International Crises and the Capitalist Pea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36(2), 115-145.
- Gasiorowski, Mark J. 1986.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Some Cross-National Eviden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0(1), 23 - 38.
- George, Alexander L. 1991.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 Boulder and Oxford: West view Press.
- Goldstein, Avery. 2001.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The China Quarterly* 168, 835-864.
- Holmes, James R. 2012. "The Sino-Japanese Naval War of 2012." *Foreign Policy*. August 20.
- Jervis, Robert. 2017.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Edi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nes, Daniel M., Stuart A. Bremer, and J. David Singer. 1996. "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816 - 1992: Rationale, Coding rules, and Empirical Pattern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15(2), 163-213.
- Mansfield, Edward D. and Jone C. Pevehouse. 2003. "Institutions,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 Gerald Schneider, Katherine Barbieri, and Nils Petter Gleditsch. *Globalization and Armed Conflict*.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McDonald, Patrick J. 2009. *The Invisible Hand of Peace: Capitalism, the War Machin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Morrow, James D. 1999. "How could Trade Affect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36(4), 481-489.
- Mousseau, Michael. 2000. "Market Prosperity,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Democratic Pea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4(4), 472-507.
- \_\_\_\_\_. 2009. "The Social Market Roots of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33(4), 52-86.
- Mueller, John. 2010. "Capitalism, Peace, and the Historical Movement of Ideas." *International Interactions* 36(2), 169-184.
- Oneal, John R. and Bruce Russett. 1997a. "The Classical Liberals Were Right: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1950 - 198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2), 267-294.
- \_\_\_\_\_. 1999a. "Assessing the Liberal Peace with Alternative Specifications: Trade Still Reduces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36(4), 423-442.
- \_\_\_\_\_. 1999b. "The Kantian Peace: The Pacific Benefits of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1885 - 1992." *World Politics* 52(1), 1 - 37.
- \_\_\_\_\_. 2000. "Comment: Why "an identified systemic model of the democracy-peace nexus" does not persuade." *Defense and Peace Economics* 11(1), 197 - 214.
- \_\_\_\_\_. 2001. "Clear and Clean: The Fixed Effects of the Liberal Pea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2), 469-485.
- Oneal, John R. and Bruce Russett and Michael L. Berbaum. 2003. "Causes of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885 - 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7(3), 371-393.
- Oneal, John R., and James Lee Ray. 1997b. "New Tests of the Democratic Peace: Controlling for Economic Interdependence, 1950-85."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0(4), 751-775.
- Oneal, John R., Oneal, F. H., Maoz, Z., & Russett, B. 1996. "The liberal peace: Interdependence, Democracy, and International Conflict, 1950-85." *Journal of Peace Research*, 33(1), 11-28.
- Pan, Zhongqi. 2007.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The Pending Controversy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12(1), 71-92.
- Pedrozo, Stacy A. 2010. "China's Active Defense Strategy and its Regional Impac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0.
- Pempel, T. J. 2011. "Japan's Search for the 'Sweet Spo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Orbis* 55(2), 255-273.
- Polachek, Solomon W. 1980. "Conflict and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1), 55-78.
- Polachek, Solomon W., John Robst, and Yuan-Ching Chang. 1999. "Liberalism and Interdependence: Extending the Trade-Conflict Model." *Journal of Peace Research* 36(4), 405-422..
- Rosecrance, Richard N. 1986.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Commerce and Conquest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Basic Books.
- Schultz, Kenneth A. 1988. "Domestic Opposition and Signaling in International Cris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829-844.
- \_\_\_\_\_. 1999. "Do Democratic Institutions Constrain or Inform?"

- Contrasting two Institutional Perspectives on Democracy an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53(2), 233-266.
- Swaine, Michael D. 2011. *America's Challenge: Engaging a Rising China in the Twenty-First Century*. Washington, DC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Waltz, Kenneth N. 2010.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USA: Waveland Press.
- Weede, Erich. 1996. *Economic Development, Social order, and World Politic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_\_\_\_\_. 2011. "The Capitalist Peace." in Christopher J. Coyne, Rachel L. Mathers. *The Handbook on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UK: Edward Elgar, 269-280.

#### 기타 자료

- "[2010 신년기획] 중국, 수출 회복세 가시화...9% 넘는 고성장 기대." 『서울경제』 2009/12/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042358> (2019/01/10 검색).
- "간 日 총리, 오바마와 첫 정상회담." 『세계일보』 2010/06/07, <http://www.segye.com/newsView/20100607003752> (2019/01/08 검색).
- "“도광양회 끝났다” 中 강경외교 사동." 『서울신문』 2010/09/2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927006014> (2018/12/28 검색).
- "동북아 '보수동맹' 균열 예고." 『한겨레』 2009/08/31,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373996.html> (2019/01/08 검색).
- "미, 이번엔 '중 자원무기화' 견제." 『한겨레』 2010/09/28, <http://www.hani.co.kr/arti/PRINT/441393.html> (2019/01/10 검색).
- "미·일 "1년간 동맹관계 재검토 협의." 『경향신문』 2009/09/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40016265&code=970203#csidx10ac9ad351df39db4fbecbc7a4c657b](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40016265&code=970203#csidx10ac9ad351df39db4fbecbc7a4c657b) (2019/01/10 검색).
- "복지 최우선...탈 관료체제 강조 '뉴 재팬' 실험." 『경향신문』 2009/09/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162354325&code=97020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162354325&code=970203) (2018/12/20 검색).
- "日기업들 "중의존 탈피"... 호주 희토류 광산권 획득" 『서울경제』 2010/11/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112350> (2018/12/20 검색).

- “日 언론의 엇갈린 對中보도… 中은 어떤 생각할까” 『동아일보』 2010/10/04  
<http://news.donga.com/3/all/20101004/31588204/1> (2018/12/20 검색).
- “중국 국방부, 美국방보고서 비난 가세.” 『연합뉴스』 2013/05/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251268> (2019/01/08 검색).
- “중국군 기관지, 센카쿠 충돌 대비 군사준비 강조” 『연합뉴스』 2013/04/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231080> (2019/01/10 검색).
- “中 예상넘는 초강경에 日 당혹” 『문화일보』 2010/09/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92401070332023004> (2018/12/28 검색).
- “中, 희토류 日 禁輸조치 풀었다.” 『문화일보』 2010/09/2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92901032532023002> (2018/12/28 검색).

Abstract

**Economic Opening and Dispute Management  
in China and Japan  
In the Senkaku/Diaoyudao Islands Dispute (2010-2012)**

Hong Kun Sik ■ Yonsei University

In September 2010, a marine collision accident occurred between the Chinese ship and the Japanese Maritime Security Service on the in the Senkaku/Diaoyudao islands. Chinese Premier Wen Jiabao demanded unconditional release of Chinese captain, rejected a meeting proposed by Japanese Chief Cabinet Secretary Yasutoshi Sengoku, and announced the suspension of rare earth resources exports to Japan only within 10 days after his arrest. Japan released the captain only after the Chinese announcement, and the dispute came to an end in 2010. After four years, on 8 November 2014, both countries promised to try to improve relations. This study questioned that how the two countries managed disputes so as to prevent territorial disputes from escalating into conflict or war. In other words, it argues that military conflict was controlled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costs, in particular import and export of rare earth resources, of the disputes of the two countries.

Key Words: China, Japan, the Senkaku/Diaoyu islands, capitalist, peace

